

이재명 정부 노동안전 정책방향과 민주노총 대응

2025년 하반기 정세 및 방침_노동안전

» 이재명 정부 산재예방 보상 정책 기조와 흐름

☑ [국정과제] 진행 중 7.28 국무회의 생중계 이후 [노동안전 범 정부 대책] 추진

☑ 산재예방 (2030년 OECD 평균 사고사망 만인율 0.29 목표)

- 사고성 재해 : 노동안전 범 정부종합 대책 (9월 15일 발표)
- 추진 체계 : 일관성 지속성 위한 가칭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산안법 개정)
- 감정노동, 보건 분야 포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추가 수립
- 민주당 산재예방 TF 산안법 발의 및 연내 통과

☑ 산재보상

- 국정과제 : 산재 처리기간 단축, 선보장 산재보험, 전 국민 산재보험 (특고·플랫폼 포함) 설정
- <산재 처리기간 단축> 우선 시행 과제 9월 1일 발표
- 노동부 <산재보험 혁신 이행 협의체> 구성. 국정과제 이행 논의
- 국회 <특고·플랫폼 사회보험 적용방안> 의제별 협의 진행 중

» 산재 처리기간 단축 대책 (2025.9.1 발표)

- 추진 목표 2024년 227.7일 → 2027년 120일로 단축
- 특진대상 축소. 특진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심의 제외
- 역학조사 대상 축소,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 높음 질판위 심의 제외
- 근골, 뇌심, 직업성 암, 정신질환 중 추정의 원칙 대상 질판위 심의 제외
- 추정의 원칙 대상 확대 :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위원회 신설 논의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전담 팀 신설, 재해조사 인력 전문성 강화. 인력증원
- 상당인과관계 반영 : 질판위 산하에 전문위원회 신설, 사전 판단후 심의
- 질판위 공정성 강화 : 1일 처리건수 축소, 전문성 강화
- 국선 산재 법률대리인 제도 도입

산재신청 이후 사업주 의견 제출기한 단축 위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0901 대책과 별도 추가)

» 노동안전 종합 대책 **정부 초안 대비 민주노총 요구 반영**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단계적 확대

- 지역 산업단지에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 근로감독과 산안 감독 통합 감독
- 노동부 감독시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명감) 참여, 노조 추천 지킴이 포함 (사외 명감 현장 출입권 관련 일부 반영)
- 특수고용 노동자 산안법 적용 직종과 규정 확대
- 공공기관 선도 : 2인1조, 6개월 미만 지침 이행 실태, 공공기관 평가 지표 배점 확대
- 중대재해 발생 기업 명단 공개
- 하청 포함 산업안전관리비 부담 집행 대책 마련

» 노동안전 종합 대책 **정부 초안 대비 민주노총 요구 반영**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단계적 확대

- 건설 불법 하도급 처벌 강화 (부분 수용)
- 하도급 제한 (공공 질식 위험 업무 하도급 제한으로 일부 수용)
- 공공 입찰 참가 자격 제도 등 경제적 제재 방안 기업 꼼수 차단 방안 (제재 효력 승계 등)
- 국민연금, 산재 예방기금 투자에 재해 발생 기업 투자 제한
- 감독권 지자체 위임시 통일된 감독 기준, 전문성 확보 문제 → 별도 법 제정 추진
- 상설 특별위원회 노동계 참여 보장

» 민주노총 요구 미 반영 **핵심 의제**

- ✓ 노동자, 노동조합 예방 참여 활동 시간 보장 및 기준 마련
- ✓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현장 출입권 등 권한 보장
- ✓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대책 전담 부서 설치
- ✓ 특수고용 노동자 산안법 전속성 폐지, 원청 책임 부여
- ✓ 노동조합·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작업중지권 부여, 임금 보전, 하청 손실 보전 등
- ✓ 도급금지, 도급 승인 대상 확대
- ✓ 감독권 지자체 위임시 감독의 통일성, 전문성, 실효성 대책 부족
- ✓ 범 정부 대책 상설화
- ✓ 학교 노동자 안전보건 대책 교육부 - 노동부
- ✓ 공공기관 감정노동 보호 행안부-노동부 등

이재명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2025.9.15)

» 2030년 사고사망 만인율 OECD 평균 0.29 목표

✓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

- 재해 예방예산 1조5,069억 → 2조723억
- 업종별 위험도 고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단계적 확대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민간위탁 지원 검토
- 지역 산업단지에 공동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업종별 협회 단체, 노사단체, 산업단지 내 관리주체 협업

이재명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2025.9.15)

» 2030년 사고사망 만인율 OECD 평균 0.29 목표

✓ 정부·자치단체 민간 협업

- 정부 감독관 증원, 사업장 감독 대폭 확대
(2025년 2만4천개 → 2026년 5만개 → 2028년 7만개/ OECD 평균)
- 불시 패트롤 신속 점검, 안전일터 신고센터 연계
- 복합 감독 (불파+ 중대재해), (산안+근로기준)
- 2026년 안전지킴이 1,000명 채용, 위촉 (노사단체 포함) 1억 미만 건설 등
초소형 사업장 집중 점검

이재명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2025. 9. 15)

» 2030년 사고사망 만인율 OECD 평균 0.29 목표

✓ 고위험 노동자 집중 지원

- ① 이주 노동자 사망 사고 발생시 1년 → 3년간 고용제한 (부상·질병 1년)
고용허가 및 고용제한 단위 (현장 → 사업주 변경)
- ② 특수고용 노동자: 산안법 적용 직종(현 14개) 및 적용 규정 확대 검토
- ③ 야간 택배 등 고위험군 특수건강진단 실시

» 이재명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2025. 9. 15)

✓ 안전주체로서 노사역할과 책무 강화

④ 도급계약시 원청의무 강화

- 민간 발주자까지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화 추진 / 공공 공사 낙찰 하한율 상향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원청 계상 의무 / 조선업 등 업종 확대
- 안전비용 하청 전가, 부당 특약 제재 강화
- 민간공사 공사기간 산정 표준계약서 명시, 폭염 등 기상재해시 공기 연장 사유 추가

④ 공공기관 선도

- 중대 사망사고 발생시 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
- 2인1조 작업, 6개월 미만 노동자 단독 작업 금지 등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이행 실태 조사 경영평가 반영, 2인1조 우선 재배치
- 공공기관 평가지표 수급업체 안전관리 반영, 평가 배점 상향 야간 택배 등 고위험군 특수건강진단 실시

» 이재명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2025. 9. 15)

✓ 안전주체로서 노사역할과 책무 강화

④ 안전관리 구조개선

- 불법 하도급 인명사고 등록 말소 기준 강화, 원하청 책무 확대, 위반시 제재강화
- 6개 분야 공공기관 하도급 실태조사 개선방안 마련
- 공공부문 질식 위험 업무 하도급 제한
-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위반시 실질적 제재 병행
- 건설현장 주체별 안전관리 역할 강화

» 이재명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2025. 9. 15)

✓ 안전주체로서
노사역할과
책무 강화

노동자
권리보장

✓ [알권리]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 500인 이상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및 확대
(재해현황 · 재발방지 대책 ·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투자 공시)
- 공공기관 산재사망 주기적 공시 확대 (부상자 공시 추가)
- 위험성 평가 노동조합 참여, 미실시 · 부적절 실시(노동자 참여 등) 처벌 도입

✓ [참여할 권리]

- 원하청 산보위 도입 : 공공기관, 사내하청이 있는 50인 이상 조선 · 철강 · 자동차 원하청
공동산보위 구성 의무화
- 건설업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의무 범위 확대, 원하청 노사 참여 (120억 → 50억)

» 이재명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2025. 9. 15)

✓ 안전주체로서
노사역할과
책무 강화

노동자
권리보장

✓ [참여할 권리]

- 사내 명감 위촉 의무화, 교육훈련 지원, 특별감독시 참여 의무화, 작업중지·시정조치 요구권 부여
- 사업장 감독 점검시 전문성 있는 노동조합, 사업주 단체 소속 명감 참여 추진

✓ [피할 권리]

- 노동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 요구권 신설
- 노동자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 (유해위험 발생 농후시)]
-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 시 불리한 처우(해고·징계) 사업주 형사처벌 신설 및 법적 구제 절차 명확화

» 이재명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2025. 9. 15)

✓ 산업안전 인프라 확대

① 자치단체에 감독권 위임

- 지자체 감독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예방 감독
- 권한 : 감독권 / 감독 이후 사후 조치 권한
- 근로감독관 직무및 사무위임에 관한 법률 제정 / 전국적 통일적 집행 기준 마련, 감독 메뉴얼 마련

② 산안감독관 증원, 행정조직 개편, 순환보직 제한

- 전문성 확보 위해 기술직 채용 확대, 인증제 도입, 감독관 교육 (신규 · 3년 미만 · 3년 이상 교육 · 감독 직무 구분)
- 2028년 3,000명 증원 (중앙 1,000명 · 지자체 2,000명)

» 이재명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2025. 9. 15)

✓ 산업안전 인프라 확대

- ④ 안전보건관리자 경력관리, 건설인 기능 등급제, 민간 재해 예방 기관 역량 강화
- ④ 대국민 직접 위험신고 포상금 지급 - 2026년 110억 편성
 - 안전조치, 보건조치 위반 (건당 50만원)
 - 산재은폐, 정부 행정명령 고의 미 이행 (건당 500만원)

» 실효성 있는 제재 및 처벌 강화

- 노동부 긴급 작업중지 명령 도입 (사망사고 없는 경우)
- 사망사고 없는 일반 감독 안전조치, 보건조치 위반 시정조치 없이 즉시 집행 (2025년 10월)
-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상향,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제정 추진
- 노동부 중대재해 전담 수사 조직, 확충, 검찰 중대재해 사건 부장검사 책임 수사제 시행, 경찰 산업재해 전담 수사관 (전국 17개 시도)
-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법인 과징금 신설(영업이익 5% 이내, 하한액 30억) 추진,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예방기금 편입
- 현행 동시 2명 이상인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제한 요청 대상 확대 [연간 다수 사망]

» 실효성 있는 제재 및 처벌 강화

-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 2회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 발생 시 건설사 등록 말소 요청 규정 신설
(노동부 요청시 건설업 등록 말소하도록 명확화)
- 건설업 외 산재사망 사고 인허가 취소 사유 반영 업종 발굴 (법제처) : 77개 법률 검토
- 민자·민간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까지 공공입찰 제한, 동시 2명에서 연간 3명 사망 추가, 꿈수 차단 위해
제재 효력 승계, 낙찰자 선정시 안전평가 강화 (물품·용역 포함)
-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정지 시 선분양 제한적용 / 미분양 직접 매입, 안심환매 지원 시 중대재해 유발 업체 심사 강화
중대재해 반복 발생시 정책자금(중기중앙회) 참여 제한
- ESG,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재해 발생 반영 (사망 2명 이상 / 국민연금 산재은폐·산재 미보고 추가)

» 이재명 정부 노동안전정책 **민주노총 대응 기조**

✓ 대응기조

- ④ 대책 마련부터 이행 점검까지 대 정부 / 대 국회 논의 구조 마련
 - 노동안전의제 교섭 체계화, 민주노총 노정교섭 쟁취 투쟁과 연계
 - 민주당 산재예방 TF, 진보정당 대국회 사업 구조
- ④ 핵심대책에 대한 현장성, 주도성 확보
 - 작업중지권, 노동자 참여, 산재보험 선보장, 특고·플랫폼 산안법
 - 산재보상
 - 작업중지권 발의 완료, 위험성 평가 입법발의 완료
 - 노동자 참여, 산재보험법 입법발의 추진

» 이재명 정부 노동안전정책 **민주노총 대응 기조**

✓ 대응기조

- ✓ 하반기 부터 2026년 4월까지 핵심의제 현장 투쟁, 대중 투쟁
- ✓ 민주노총 정책 대응, 현장 대응 투쟁 체계 구축
 - 총연맹 산재 대응팀 구성 (노안 · 법률 · 정책 · 언론 · 교육선전)
: 2026년 4월까지 가동
 - 민주노총 전 조직 간담회
 - 노조법 시행 시기 연동 원하청 산보위 대응 사업
 - 민주노총 현장 노안 활동 활성화 위한 교육체계 구축
 - 중대재해 대응 메뉴얼 정비 및 가동 / 의제별 대응 구조 구축

» 이재명 정부 노동안전정책 **민주노총 투쟁 흐름**

시기	2025년 8월~9월	2025년 10월~12월
주요 기 조	▼ 8월 - 정부 발표대책 개입 - 노정교섭구조 마련 - 노안활동가 대회 ▼ 9월 - 기자간담회 - 정책 워크숍 (노동안전 종합 대책 단체, 전문가 참여) - 노동자 참여, 작업중지 긴급 설문조사	- 국정감사 대응 - 작업중지권 입법 촉구 선언운동 (10월 20일~11월 20일) - 작업중지권 입법 촉구 전국 지역별 선전전·캠페인 (10월 20일~11월 20일) - 국회 입법 촉구 농성 투쟁 (11월 24일~11월 28일)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워크숍 : 10월 22일 - 원하청 산보위 사업장 간담회 : 10월 28일 - 지자체 안전보건지킴이 워크숍 : 12월

» 이재명 정부 노동안전정책 **민주노총 투쟁 흐름**

시기	2026년 1월~3월	2026년 4월
주요 기 조	- 산안법 위반, 중처법 처벌 관련 집중 대응 - 노동안전보건 순회 간담회 - 민주노총 중대재해 대응 메뉴얼 재정비 및 실질 가동	-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 4.28 산재노동자의 날 대중적 사업으로 전개 - 주요 핵심 입법 쟁취

» 민주노총 핵심 대응 방안 - **작업중지권 쟁취**

✓ **작업중지권 실태**

- ④ **작업중지권 현장 사용 실태**
 - 사업장 내 작업중지권 사용 못한다 응답 83.1%
(100인 이상 제조업 1,041명 조사)
 - “작업중지권이 산재예방에 효과 있다.” 80.5%
 - 건설노동자 82.7% “작업중지권 사용 못한다.”
(2024년 2,654명 조사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 민주노총 핵심 대응 방안 - **작업중지권 쟁취**

✓ **작업중지권 동향**

- 금속노조 콘티넨탈 사업장 : 인근 사업장 화학사고에 노조 지회장 작업중지 명령, 회사가 징계. 노동조합의 8년 여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작업중지권의 정당성, 징계의 부당성 판결
- 삼성물산 : 중대재해 예방대책으로 2021년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전국 113개 현장 총 5만3천여건 작업중지, 작업중지권 발동, 위험상황 신고 등 하청 노동자 포상금, 하청업체 계약 우선 등 인센티브 부여, 작업중지권 사용 노동자 안전의식 높아짐
- 폭염시 작업중지권 사회적 공감대 확산 : 폭염 산안규칙 입법예고 민주노총 연서명에 7일간 3만2천여명 참여. 주요내용, 특고·비정규노동자 전면 적용과 35도 폭염 작업중지

» 민주노총 핵심 대응 방안 - **작업중지권 쟁취**

✓ **작업중지권 동향**

- 노동부 폭염 산안규칙에는 2시간 작업 20분 휴식 규정
노동부 권고 및 가이드라인으로 35도 폭염 작업시 작업중지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노동자 작업중지권 명시
: 작업중지 요건 완화
: 노동자 작업중지 요청권 신설
: 작업중지 불이익 처우 사업주 처벌, 구제절차 명확화
- 국회 작업중지권 개정 법안 다수 발의 : 하청 · 특고 노동자 작업중지권, 노동조합
작업중지권, 임금 보전, 작업중지 시 사업주 손해배상 금지 등

» 금속노조 2025년 8월 산별협약, 작업중지권 잠정 합의

▼ 단협에 작업중지권 조항 신설

- 회사내 노동자 (사내 하청 포함) 산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작업중지, 대피할 수 있다. 즉시 통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작업중지권 보장
- 작업중지권을 안전보건상의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남용하지 않는다.
- 작업중지 이후 안전보건조치 이후 조합에 알려 확인토록 한 뒤 작업 재개
- 작업중지, 대피를 이유로 징계·해고·손해배상청구·고소고발 등 불이익 줄 수 없다.
(안전보건상의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남용시 제외)
-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에 대한 작업중지권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시행

» ILO 제155조 산업안전보건협약 (한국은 협약 비준 국가)

[제13조] 근로자가 자신의 생명이나 보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경우 이에 합리적인 정당성이 있어 작업환경으로부터 스스로 이탈한 경우 국내 여건과 국내 관행에 따른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제19조] 사업장 차원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바)근로자가 자신의 생명이나 보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모든 상황을 자신의 직속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구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생명이나 보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 작업 상황으로 복귀할 것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 ILO 제155조 산업안전보건협약 (한국은 협약 비준 국가)

국가	작업중지권 관련 규정
중국	- 안전생산법 급박한 위험뿐 아니라, 안전보건 규칙을 위반한 작업명령도 거부권 부여
캐나다	-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보건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거부권 부여, 산안법에 위배 되는 경우도 부여 - 위험에 대해 노사간 판단이 다르면 노사 모두 동의할 때만 작업 거부권 번복 가능. 사업주의 일방 작업 재개 불가
프랑스	- 노동자가 위험작업을 중지하기 전에 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중지권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 둘 수 없음
영국	- 하청 · 특수고용 모든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 보장
호주	- 노동자 안전대표에게 작업중지권 보장 - 하청, 파견 등 모든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 보장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 노동자 안전대표에게 작업중지권 보장 - 하청, 파견 등 모든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 보장

» 민주노총 작업중지권 입법발의 안 (2025년 7월 11일)

▼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 작업중지 요건 확대 (노동자 작업중지권 동일)
- 급박한 위험, 작업전 안전조치 보건조치 미비, 유해위험 요인 노출로 생명안전에 우려, 폭염·폭우 등 악천후,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으로 건강장해 발생우려
- 작업중지 임금 감소분 전부 보전
- 국가 악천후 작업중지 임금 감소분 지원

» 민주노총 작업중지권 입법발의 안 (2025년 7월 11일)

▼ 노동자의 작업중지 권리

- 작업중지 요건 확대
- 노동자, 노동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작업중지권
- 산안법 특고·플랫폼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 작업을 중지한 노동자에게 개선 조치 없이 일방적 작업재개 요구금지
- 작업 중지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 처우 형사처벌
- 사업주·원청은 작업중지 기간의 임금, 하청 손실보장 공동연대 책임

» 민주노총 작업중지권 입법발의 안 (2025년 7월 11일)

▼
**노동부
중대재해 발생
작업중지 명령**

- 노동부 전면 작업중지명령 요건 완화
- 작업중지 해제 신청시 노동자 의견 청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 이후 신청
- 노동부는 안전보건조치 완료, 원하청 노동자 대표 의견 확인하고 해제심의위 개최
-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노동자 대표 추천 전문가 참여, 전원 동의 작업중지 해제
- 노동부는 해제 이후 개선 이행 감독관 현장 확인, 원하청 노동자 대표 의견 확인

» 지속된 작업중지권 쟁취 투쟁



2024년 4월 2일

작업중지권 요구안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



2025년 7월 2일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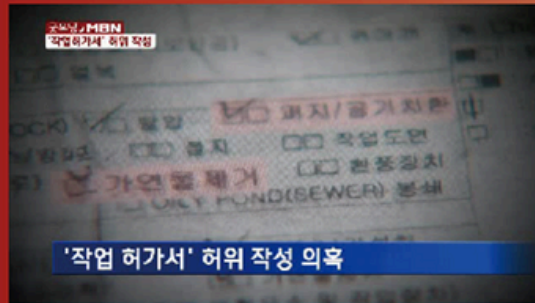
2025년 7월 10일

국회 기자회견

» 지속된 작업중지권 쟁취 투쟁

안전하지 않은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위험작업 NO!



전류 가스에 의한 폭발사고 위험으로
하청 건설 노동자들 작업 거부
안전하다고 조작된 작업허가서 씨인 강요하고,
작업 투입시킨 대립 산업.
결국 용접작업 중 전류 가스로 인한 폭발 사고로
노동자 6명 사망 11명 부상

위험 작업 거부하는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현장을 개선했더라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급박한 상황뿐만 아니라
안전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 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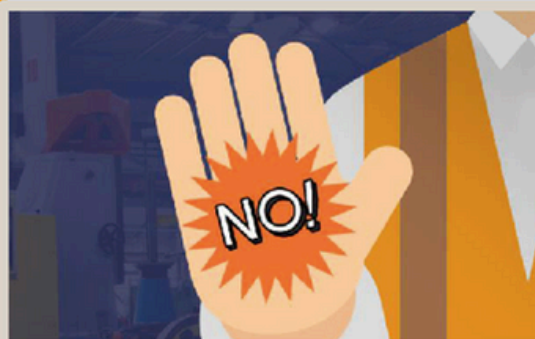
-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 보장
- 작업중지 노동자에게는 인센티브 지급
- 작업중지로 인한 하청·일용직 노동자
임금 손실분 보전



2인1조 근무 원칙이었지만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아간 단독 작업 할 수 밖에 없었던 김용균 노동자
결국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

컨베이어벨트 멈추는
'폴코드' 잡아 줄 수 있는
동료가 있었다면...

성희롱, 언어폭력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콜센터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통화거절권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보장하는 사업장



'작업중지권'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작업중지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해고·불이익 처우 금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 1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보장
- 2 작업중지 시 하청 노동자 휴업 수당과 손실 보장
- 3 작업중지에 대한 징계, 소송 등 불이익 처우 금지
- 4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작업중지권 보장

» 민주노총 핵심 대응 방안 - **노동자 참여 쟁취**

☑ **산재예방 활동에 노동자,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

- 산재예방 활동시간 유급 보장, 최소기준 명시 (타임오프와 별도 보장)
- 사업주의 정기점검, 원청의 순회 점검에 원하청 노동조합 참여 보장
-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고조사 등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참여 보장
-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화 및 원청기업의 부당 지배개입 근절 대책 마련
- 노동자 참여 산재예방제도 부실 운영에 대한 노동부 감독 및 처벌 강화
- 사내·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권한 강화 및 전면 보장, 유급 활동시간 보장
- 업종별 지역별 명감협의회 구성 의무화 및 활동 강화 대책 마련

» 작업중지권 · 노동자 참여 쟁취 **민주노총 투쟁 흐름**

시기	2025년 8월~9월	2025년 10월~12월
주요 기 조	▼ 8월 - 정부 발표대책 개입 - 노정교섭구조 마련 - 노안활동가 대회 ▼ 9월 - 기자간담회 - 정책 워크숍 (노동안전 종합 대책 단체, 전문가 참여) - 노동자 참여, 작업중지 긴급 설문조사	- 국정감사 대응 - 작업중지권 입법 촉구 선언운동 (10월 20일~11월 20일) - 작업중지권 입법 촉구 전국 지역별 선전전 · 캠페인 (10월 20일~11월 20일) - 국회 입법 촉구 농성 투쟁 (11월 24일~11월 28일)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워크숍 : 10월 22일 - 원하청 산보위 사업장 간담회 : 10월 28일 - 지자체 안전보건지킴이 워크숍 : 12월

» 작업중지권 · 노동자 참여 쟁취 **민주노총 투쟁 흐름**

시기	2026년 1월~3월	2026년 4월
주요 기 조	- 산안법 위반, 중처법 처벌 관련 집중 대응 - 노동안전보건 순회 간담회 - 민주노총 중대재해 대응 메뉴얼 재정비 및 실질 가동	-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 4.28 산재노동자의 날 대중적 사업으로 전개 - 주요 핵심 입법 쟁취

» 이재명 정부 노동안전 종합정책 **민주노총 대응**

④ 노동안전 종합 대책 방향은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의 요구 반영

- 노동자를 예방 주체로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 명시
- 작은 사업장 선제적 예방 감독 강화, 감독관 증원, 전문성 강화
- 법 위반, 산재다발 기업에 대한 촘촘한 경제적 제재

④ 세부 내용은 불투명, 이주, 특수고용, 작업중지권, 노동자 참여의 핵심 요구 누락

④ 경영계와 보수 경제지들의 반격 시작

» 이재명 정부 노동안전 종합정책 **민주노총 대응**

✔ **민주노총이 나서야 한다!**

- 정책 전반에 대한 개입 강화
- 작업중지권, 노동자 참여 실질 보장 입법 쟁취
-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미조직 작은 사업장 예방 활동을 위한 조직적 준비
- 노동자·노동조합 주도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산업재해 실질 감축 쟁취

광장의 민주주의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터의 민주주의로

광장의 민주주의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터의 민주주의로

죽지않고 일할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광장의 민주주의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터의 민주주의로

죽지않고 일할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민주노총이 길을 엽시다!

광장의 민주주의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터의 민주주의로

죽지않고 일할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민주노총이 길을 엮시다!

문의	민주노총 교육선전실
연락처	02. 2670. 9125, 6

